

데스크 시각

6g의 무한권력



장 필수 정치부장

어른 손톱만한 지름 1.6cm 크기에 무게는 6g. 이 작은 노란 물건에 무려 200여 가지의 특색이 얹혀져 있다. 국회의원 배지, 줄여 ‘금배지’ 얘기다.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주어진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아닌 이상 국회 동의를 얻어 체포해야 하는 ‘불체포특권’은 논의다.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니까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 한 명의 연간 세비, 그러니까 연봉은 1억3796만 원(2013년 기준)이다. 밥을 만들고 정부의 견제 활동을 감안하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인당 GDP(국민총생산) 기준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 인턴을 제외하더라도 7명의 보좌진에게 연간 3억

8000여만 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여기에 연 2회 이상 해외사찰과 항공기 1등석·KTX·선박 이용시 전액 무료다. 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냈다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 국회의원 한명에게 국민의 주머니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6억 원인 셈이다.

재보선에 입지자 붓물

금배지들을 너무 세금 먹는 하마로만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법률 제정으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의원들이 많고 대다수는 밥값 이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공인된 특혜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깝게는 지난 4월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한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해결 경비정을 얻어타고 사고 현장에 갔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누리는 특혜가 많으니 선거 때면 부나방 처럼 달려드는 것을 탓할 순 없다. 요즘이 바로 부나방이 날아드는 때다.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다. 유권자의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 246명 중 16명이 한 달 후면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

에 입성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선 4명이다. 19명 가운데 4명이 새로 뽑힌다. 최대 규모다 보니 ‘미니총선’이라고 부를 정도다.

두 곳은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운 곳이고, 두 곳은 대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관계로 공천만 받은 당 선되는 풍토는 여전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위원회를 꾸리고 24일부터 후보 공모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한 곳 당 매통에는 10여 명이 공천 전정을 벌이고 있다.

후보자들은 크게 두 부류다. 오래 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활동하다 내려온 ‘출향파’와 줄곧 이곳에서 활동해 온 ‘고향 지킴이’다. 단순히 어느쪽이 좋고 나쁘다거나, 능력이 뛰어나고 떨어진다 구분할 수는 없다. 선택 기준은 누가 더 고향 발전에 헌신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해내는가다.

호남 대표할 리더 뽑아야

판이 크다보니 어느 때보다 인물의 됬됨이나 능력면에서 훌륭한 입지자들이 많다. 정치 대권을 쥘듯도 될만한 중량급 인사들도 눈에 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출향파와 고향 지킴

이, 중량급과 신진들의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참신한 인물을 선택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한편에선 중량급 인사를 호남의 대표 주자로 키울 수 있어서 좋다. 중량급 인사를 지역에서부터 챙겨 주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을 ‘포스트 DJ’가 없다는 점, 호남정치가 실종됐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 최대 관심지역구인 순천·곡성도의 의미가 있다.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역타파를 기치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곳이다. 떨어질 줄을 뻔히 알면서도 네 번째 도전에 나선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을 흔히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선량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이다. 유권자들도 잘 뽑았고 인물이 훌륭하다는 뜻이다. 중의(重義)적인 의미로, 선거를 이렇게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다.

조만간 정당의 후보가 가려지고 한달 쯤 후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공천에서나 투표에서나 선량이 지켜졌으면 한다.

/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후안무치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



김 병인 서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고 명기했다.

보고서는 또 “담화 발표 전날인 1993년 8월 3일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본국의 훈령에 근거해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안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로서는 그 문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비록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고노 담화 자체 검증 보고서의 사실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노 담화 자체검증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다시 한 번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제2차세계대전중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아시아의 많은 위안부 피해 국가 인민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분을 사는 행위이고 피해자 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

처를 주는 행위이다. 만약에 그들의 어머니가 누이가 위안부였다면 그렇게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싶다.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강제적으로 대규모로 위안부를 징집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 기간 중 저지른 가장 잔악하고 반인륜적인 죄악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강제적으로 징집한 위안부는 70만 명에 달했다. 피해국 인민에게 엄중한 상처를 주었다. 1993년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는 담화를 발표하고 군의 위안부 강제 징집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했다. 이 담화가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다. 사실 고노의 담화도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다 돼서야 이뤄진, 때로는 참회하고 사죄였다. 아마져 현재 아베 정부에 이르러 고노 담화 자체검증 보고서에 의해 부정된다면 이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어리석은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양식 있는 세계 인민들이 단호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는 명확한 고노 담화의 부정이다. 이는 평화와 발전을 중시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인류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중국정부는 20일 일본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고 기도하는 그 어떤 행동도 인심을 얻을 수 없다”고 논평했고, 미국 국무부도 20일 “고노 담화 계승은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이라고 밝혔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의 길로 되돌리려는 일본에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무이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양식 있는 세력과 연대해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를 억제해야 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시내버스업계 방만 경영 이대론 안 된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은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버스 노조 측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임금이 가장 낮으며 5.29%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현재 운전기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의 요구대로 5.29%를 인상하면 재정이 51억 원 추가 부담된다고 3.62%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조가 시내버스 파업을 강행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시민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속인 버스 회사들과 광주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회사들이 경영 합리화 차원의 노력을 해왔고, 광주시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증체계만 보더라도 부실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07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

버스에 7년간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경영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여론에 못이겨 단 한차례 회계감사를 실시했지만 그마저 벽에 부딪쳐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버스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버스 사업주가 요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이익마저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의 불투명한 경영은 고사하고 퇴직금 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다.

광주시는 이번 버스 파업을 계기로 적어도 준공영제에 걸맞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버스 회사들의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업체 간 통합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혈세 수혈과 파업의 악순환에 시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전남 산업구조 개편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수년간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919억 원에 달했던 광양시의 도세(道稅)와 시세(市稅) 등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말 1681억 원으로 238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시세는 무려 388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광양시 경제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포스코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4년 전 903억여 원에 달했던 지방소득세가 지난해에는 236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석유화학의 거점인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이 최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LG화학은 2010년 영업이익이 2조 8411억 원에 이르렀지만 지난해에는 1조 7430억 원으로, GS칼텍스는 2011년 2조200억 원에서 이듬해 5109억 원으

로 떨어졌다. 조선산업도 세계 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영업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저리한 영업군의 군세 수입은 지난 2009년 50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473억 원으로 줄었다.

석유화학과 철강 및 조선은 전남의 수출액이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지역의 주력산업이다. 지난해 전남 수출액 414억 달러 가운데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5%에 달했다. 하지만 그만큼 산업구조가 특성 분야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위기 때는 위험분산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전남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게 하려면 지역 특화산업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바이오·생물·신소재·우주항공·자동차 부품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 인수 위원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無等鼓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일했던 89세의 요한 브레이어가 미국 연방정부에 체포됐다는 것이다. 그는 1944년 폴란드의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총 158건의 유대인 살해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치매증상이 있고, 도주 위험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죄질이 심각하고, 소송 절차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브레이어를 보석 없이

일제 전범 수색대

구금했다. 미국이 나치 전범혐의로 체포한 인물 가운데 최고령인 브레이어는 지난 1944년 17세의 나이로 나치 친위대에 가입했다. 독일이 패망한 후에는 미국에서 생활해 왔다.

NYT의 이 기사는 2년 전 미국 언론에 게재됐던 기사의 연속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2012년 9월 ‘독일이 주도하는 나치 전범 수사단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87세 노인을 아우슈비츠 학살 수용소에서 SS대원으로 일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보도했었다. 그때 적발된 인물이 바로 브레이어다.

나치 전범 수색대인 ‘시몬 비텐펠 텐터’의 수색단장인 에프라이م 주로프는 당시 인터뷰에서 “전범들은 아무런 죄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이 흘러도 전범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도 지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전범 수색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용케 모음을 감추는 데 성공한

전범들에게는 악몽이겠지만,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일제에 유린 당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전범범죄의 단죄는커녕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직까지도 합당한 피해 보상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전략의 역사를 철저히 사죄한 독일과는 달리,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할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일제 전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가 부족했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일제 전범 수색대’가 있어야 했다.

/홍형기 경제부장 redplane@

기 고



정 기연 전 영암신북초 교장

병역의무 수행자가 우대받는 대한민국

보통책을 하는가 하면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가 되고 있다.

병역 의무 수행 적정 연령이 되면 영장이 나오기 전에 자원해서 병역 의무에 응하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병역의무를 완수한 자가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가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자나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자녀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많음을 정문회에서 흔히 본다. 자기 자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게 하고 남의 자녀에게는 군 복무를 마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의무는 도외시한 채 남의 덕을 보며 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주권 국민으로서 결코 온당치 못한 처사다.

6·25 전쟁 때 중국의 모택동은 아들을 군에 보냈으며, 그 아들은 한국전에서 전사했다. 그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터에 자녀를 보내

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울 것이다. 도둑이 담을 뛰어넘는다면 누가 도둑과 싸워 물리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싸워 적을 물리쳐야 내 가정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으며, 정전 아닌 휴전상태로 6·25전쟁 6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 사는 우리 국민이 일차적으로 할 일은,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북한 공산집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병역을 마친 사람은 부가점을 주어 취업에서 우대받도록 하거나, 기업체에서는 병역의무 미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은 병역을 자랑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이라 하는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애국심의 발현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6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유학 중인 이스라엘 학생은 잠깐 하러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학생들은 전쟁은 아랑곳없이 유원지로 놀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이 강대국 이집트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됐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5·16군사 쿠데타 후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서 병역 미필자를 색출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병역의무 미필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했었다. 하지만,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 병역미필자가 증가하는 시대로 변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 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진국 건설도, 경제발전도 국토방위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전쟁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만큼 국민의 4대 의무인 국토방위, 납세, 교육, 근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나라가 우대받는 대한민국을 되여야 한다.

총기난사 탈영병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지난 21일 강원도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또다시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하는 총기난사 사고가 또 발생했다. 주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임도병장이 부대원들에게 수류탄 1발을 터뜨리고 실탄 10여발을 발사하고 무장한 채 탈영해 군과 총격전까지 벌였다고 한다. 특히 이쪽 22사단은 1988년에 수류탄 투척, 2009년 철책절단, 2012년 노크 귀순 등 사고가 많기로 유명하며 30년전에도

한 병사의 총기난사와 수류탄 투척으로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적이 있는 위험하고 빼어난 지역이다. 이처럼 많이 그리고 대형사고가 터지는 곳이란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군부대에서 총기난사는 막아야 할 최악의 군기사고로 잇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어 부모들이 어떻게 군을 믿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군 당국은 사고가 날때 마다 대국민사

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지만 그야말로 빈말과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고원인이 분석되고 밝혀져야겠지만 가장 의문스런 점은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둔 말년 병장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며 이미 자살 사고 가능성이 큰 A급 관심병사에게 GOP 초소근무를 맡겼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언제든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병사를 이런 초소근무를 시킨다든가 실탄임무를 맡겼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인재사고로 보아야 하며 군의 병력 신상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사병들이 과거와 달리 사회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입대해 너무 경직되고 타이프한 군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 훈련 외에 지나친 군기는 탈영과 자살의 원인 제공에 됬에 비추어 이제 군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비추어 과거처럼 고집주의 병폐와 체질이 사라져야 하리라 본다.

▲우정렬·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